

제2주제

백제문화와 지역문화의 연계 및 문화벨트 형성 방안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전통문화(백제문화)와 지역문화발전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지수 향상 방안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백제권으로만 한정해서 논한다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다.

백제역사도 시기별로 영향권이나 문화영역의 폭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고려와 조선, 근대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충남권의 역사와 문화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충남의 전통문화를 거론할 때 백제권으로 이미지를 고착하는 방식과 고려의 대외 교류와 조선의 대외 교류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적 사실을 충남의 역사와 문화로 승화시키는 방안이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이미 충청남도와 도내 많은 대학과 소속연구기관들이 충남의 역사문화를 시대별, 역사문화권별로 기본 연구정리는 되어있으며, 이와 아울러 복원계획과 역사유적 정비계획이 마련 되어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진 계획들이 충남의 역사문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아젠다 설정을 못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국가(문화재청)에서 계획 중인 백제문화재 정비계획이 있으나 추진 예산이나 진행과정을 “경주역사문화도시”와 비교해본다면 5,000억대 500억대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내포문화권특정지역 문화유적정비 역시 200억대 수준이며,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유산을 소유하지 못한 역사문화권으로서의 공주의산부여 등 백제역사문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움직임도 겨우 이제 궤도로 진입되고 있다.

예산의 크기로 매사를 단정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권의 개발과 보존에 투입되는 중앙정부나 도 차원의 규모에 비해 충남도 및 백제권에 속한 지자체의 예산 배정에는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할 대목이다.

여러 계획도 단, 중,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의 구분이 필요하며 나열식, 평면적 대책 보다 입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행정이나 집행의 근원이 되어야 할 연구기능도 "백제학" 더 나아가 "공주학" "부여학"을 연구하는 지역대학의 연구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아젠다 설정이 지역문화의 발전에서 만사형통은 아니다.

서울의 한강르네상스처럼 하드웨어 중심의 토건문화발전이 아닌, 지역민들의 문화지수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전통문화(문화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최근 전통문화의 보존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으면서 최대의 화두는 80년대, 90년대 보존과 관리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살펴보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의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재 주변의 정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나 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며 고통을 받으면서 거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이 역사문화의 "백제"에 삶의 터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괴로움" 이라는 사실이다.

원인을 살펴보면(발제자의 편의상) 역사적, 종교적(사회구성체 포함), 정치적인 이유로 희비가 교차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 지역시민들은 타인에게 이유를 넘겨 버리고 우리 모두의 숙제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전통문화(문화재)와 관광=경제적 이익

현재 충남은 전통문화보다 서해안 관광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예산투입 비율이 높다. 이 대목에서 “경주”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겠다.

70년대 경주의 개발은 정치적 이유 즉 북한의 고구려 복원정책에 대응해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이념을 찾으면서 고구려와 상응하는 "통일신라"를 정치적 통치이념의 도구로 삼으며, 경주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오히려 박정희식 개발은 철학과 경영마인드, 도시계획 등의 종합 경영이 되지 못해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 우리에게 더 많은 숙제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불국사나 석불사처럼 일부의 유적이 편향적으로 보존되기는 했다.

그렇다면 지자체나 경주시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과연 바람직한 생각(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70년대 관광객으로 인해 벌어지는 잉여가치에 익숙해져서 불과 20년 후의 어려움을 예견하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에 감정적 대응보다는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 관광객이 감소하고,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생존권, 경제적 생활 보장 확보" 등의 이슈가 등장하자 "경마장 건설" "핵폐기장 유치"라는 근시안적인 방법에 몰두 되어 있다.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광 코스와 머물 수 있는 구상을 하기보다는 "중국의 규모" 와 경주를 비교하거나 볼거리가 없다는 등의 안이한 생각만 하고 있다.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생각하며 이제는 보존과 관리, 활용의 차원에서 진보한 Heritage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해야한다.

경주 경영의 실패 요인 (관광객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소비자주권 무시²⁾라는 큰 원인이 존재한다.

1. 교통의 불편

- 유적지와 즉시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불편
- 서울의 2.5배인 택시요금이며 유적지에서 택시 타기는 불가능한 상태
이는 소수 운송업자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역효과만 발생할 것임. -
관광객이 처음 상대하는 곳이 바로 교통수단 임. 대부분의 택시가 대형 호텔과 연결되어 장거리 손님만 선택함.
- 불친절(유적지 매표소, 택시 기사 등등)과 세련되지 못한 태도.

2. 관광안내 시설 미비

- 사적지 등 문화재관람을 위한 안내표지판(지도), 관광안내정보센터, 팸플릿 미비 - 특급 호텔에서 나누어주는 지도조차도 불성실함.
- 유명 유적지 이외의 폐사지(석탑) 등의 안내판은 거의 전무한 실정
- 사적지 관리의 민간 위탁으로 유적의 홍보, 관리등의 공공적 의무보다 입장료 수입과 주차료 징수 등에만 신경 쓰고 있음.

3.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물가

- 4. 역사문화 답사 및 관광코스의 평면적 나열로 인한 지루함과 무료함.
문화유산해설사 등의 자원 활동가 양성 미비.

5. 경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 프로그램 미비.

6. 숙박(머무는 공간) 시설의 편중 -

- 7. 세상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없는(싫어하는) 지역의 독특한 정서
-그러나 관광은 서비스이며, 사업이다.

영국의 'English Heritage' 재단의 Heritage Management 개념의 근간인 PPG16, MAP2 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충남도에 대비해볼 필요가 있다.

충남은 다양한 문화적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물적, 정신적 토대 (Capital 또는 Foundation)를 경영(Management) 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 보아야 한다. 최근의 화두처럼 보존, 관리, 활용의 좁은 범위가 아니라 충남권 전체를 경영(운용)하는 큰 개념의 문화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기이다.

2) 2007년 경주의 현상을 조사한 것으로 현재는 대부분 고쳐졌으며, 충남에는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점검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나열한 것입니다.

백제권의 문화지수 개발은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현장감이 떨어지고, 프로젝트 수주 차원에서 만사를 진행하려는 연구용역도 우려할 일이다.

경주의 경우 기존 대형 시설(호텔, 콘도, 골프장 등)등의 경제적 이익은 모두 경주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어야하며,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도 경주 시민이 주인(주주)이 되어 실질적으로 경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현재처럼 외부 대자본에 의해 건립된 대형 시설에서 경주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겨우 부차적인(청소, 도어맨류의 일들...) 것들뿐이라 는 것이다. 마치 제 땅을 내어주고만 아메리카 인디언처럼.....

또한 기타 경제적 이익 발생이 많은 시설도 대부분 외부 자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주를 경영할 수 있는 가치 "경주관리공단" 이라는 공익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며, 경주관리공단의 주주는 전 경주시민이 되는 형태가 필요 하다.

이 부분에서 충남이 “백제역사재현단지” 운영권과 주변의 대형숙박시설, 골프장운영 등을 외부 업체에게 넘겨버린 것은 결국 외부 대자본에게 역사문화를 팔아버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주의 관광사업이 시사하는 점을 충남이 되풀이해야 하는가를 곰곰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 백제문화의 보존 및 활용과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 방안

최근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문화의 보존과 연구에 관한 노력과 열정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시민들 스스로 우리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문화유산 행정과 정책이 변화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문화재 행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다른 변화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문화재 정책에서 일부 제한적, 형식적,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문화재 1지킴이를 선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NGO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시민참여 확대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행정을 구현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다.

기존 문화유산 행정과 정책은 공공기관과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과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의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문화유산보존과 활용은 시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사해석과 문화해석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었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한 시민사회의 의견들이 조금씩 정부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한 문화사회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유·무형 문화유산의 관리는 중앙정부로는 문화재청이 있고, 지자체의 문화재담당 직원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조직, 예산으로는 수 만 종류의 문화재를 보호, 활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대한 개발정책과 날로 조직화, 전문화되어 가는 문화재 도난, 훼손에 대해서도 기존 관료조직으로 지켜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근 문화재사랑에 대한 시민의식과 활동이 점차적으로 증가해가고 있으며, 문화재보존과 활용에 시민단체의 활동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형태이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와 참여방식의 제한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문화재 행정 당국과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청취하고 수렴할 제도적 장치가 없던 것도 큰 문제이기도 했다.

■ 문화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개선

기존 문화재위원회는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어렵게만 인식되어온 문화재관련 학설이나 분석분야에서 문화재전문가들이 오히려 자신의 학설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학맥에 연결되어 있는 후학들은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는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일부 문화재위원들은 전문학자적 양심에 불합치하는 결정과 문화재 보존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문화재위원의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따라서 이제부터 문화재주변의 현상변경 결정은 문화재위원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배심원처럼 각계의 시민(민간)들이 참여, 논의, 결정하고, 문화재전문가들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사실이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문화유산 행정의 공개 원칙

행정기관과 일반시민(시민단체)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공개와 비공개'의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행정기관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공개해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문화유산도 훼손 방지 및 보호, 관리의 어려움, 종교 수행시설, 군사 시설 점령 등의 이유로 비공개지역이 존재하고 중요한 정책심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한다. 문제는 문화재 비공개지역과 정책 심의 과정이 문화재가 보호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화재들이 방치되거나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찰의 종교 수행시설을 빙자한 비공개지역에서 일반 신도에 대한 무원칙한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관람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사찰 입장료 수입의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옴부즈맨 제도 도입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시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서울시에서 관급 공사 시에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써 각종 공사와 입찰과정에 시민감시단(옴부즈맨)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 입찰, 수주, 공사과정, 감리) 관리 감독하며 시민 옴부즈맨의 동의가 있어야만 완결 할 수 있다.

현재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마다 문화재지킴이 시민단체, 문화유산 해설사, 역사 교사, 향토 사학자 등이 존재한다. 이들은 무보수, 자원봉사, 강한 신념, 문화재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뭉친 시민들이다. 이들은 사심이 없고, 일부 학자들처럼 학맥에 연연하지 않는 순수한 시민들이다. 이들을 문화재보수공사와 각종 시험, 입찰 때 감리단으로 참석하는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 도내 문화유산관리 기구의 일원화

우리나라 문화유산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가 동산 중심의 박물관과 부동산과 건조물중심의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며, 두 기관이 서로 원활한 업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관리의 작은 정부예산(문화재청 5천억대, 박물관 900억대)이 두 조직을 운용함으로써 예산낭비, 효율적인 문화유산관리의 부재에 대한 지적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국립박물관의 지방박물관 건립과 문화재청의 조직 확대주장(지역 문화재연구소 확충)의 난개발식 확충은 두 기관이 「효율적 시스템 통합」에 대한 진솔한 정책이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화재청도 지방청을 만들겠다고 한다. 오히려 현재 있는 지역의 국립박물관을 지역문화유산관리의 중심(Hub)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특색 있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중심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의 구성은 전문인력(학예직)이 다수이지만, 이들의 행정 집행력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지역박물관과 지역의 행정관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현재 지역의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전문가(학예직, 기술직)들에 의해 결정이 되고 행정은 이들의 결정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바람직한 시스템의 결합이 될 것이다.

이제 문화유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학자나 관리가 주인은 아니며 이들에 의해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시대는 아니다.

21세기 국가문화유산 정책의 실천방안이 제시되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표본으로 이원화, 방만화 되어 있는 조직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문화유산정책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경우도 도청내 전체 문화재와 박물관 미술관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된 기구가 필요하다.

■ 자금심 고취와 간전화폐지원 방식의 도입

충남도 포함해서 전국에 대략적으로 지정, 비지정인 상태로 약 4만 여 채의 한옥이 존재한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워져있다. 비워있다 보니 훼손상태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인이 한옥에서 살지 못하는 큰 이유는 생활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대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원형을 훼손하며 사람을 거주하게 할 수 없는 형편도 잘 알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행사나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지정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난맥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문화재에 거주하거나 문화재로 지정되는 지역 거주민에게 자금심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즉 문화재(문화재보호 구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포함)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보상은 정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접 경비지원방식보다 간접 예산지원 방식 즉 세제혜택(재산세면제, 철도항공요금 할인, 특소세면제, 자녀 학자금 면제 등)을 주는 국가유공자급에 대한 예우를 한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국에 산재한 한옥에 살려고 할 것이고,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몰려들 것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위기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고통을 감내하고 지켜내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합의(법령제정, 세제혜택)를 바탕으로 보존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시행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발굴과정에서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대도시 재건축을 위해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지표조사, 시굴 발굴 조사 비용에도 해당 기업체에게 발굴 비용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주어서 기업으로 하여금 발굴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혜택을 주어야하며, 발굴된 유구들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체가 박물관 조성등에 관한 계획이 있을 경우 유물 소장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야하며, 문화재청이나 국립박물관등은 전시, 기획등에 관한 지원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기업체가 공사중 또는 문화재조사 사업에 참여하게 하면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특화된 이미지를 기업이미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나이키를 상표로 활용)

■ 문화교육과 문화기획학교

현재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 시절보다 상당히 향상되어 있으나, 아직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초중등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부재한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사회 지도층들의 각종 글과 발표문을 보면 문화재에 대한 근본적 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을 수시로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도내 많은 문화단체는 어려운 상황아래서 스스로 자금을 확보해서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유료와 무료 교육이 상존하지만, 이러한 자발적 교육을 충남도와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비영리 문화시민단체에

서 주관하는 유료 교육의 교육비도 기초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화지수의 향상은 스스로 기획해보고 실현해 내는 과정이 학습되어져야 한다. 도내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소산물은 전문기획가만의 점유물은 아니다. 주변에 산재한 역사문화적 소재를 활용하는 기획력은 스스로의 문화지수를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자신이 기획해서 주변에 작품과 같은 결과물을 소개하고, 다른 이들의 창작물을 보고 배우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작은 문화기획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문화기획학교를 개설하는데 지원하고 과감하게 타지역이나 외부의 다양한 기획가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통해 재교육이 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크고 작은 문화기획가는 향후 충남도의 어마어마한 문화자산이 될 것이다.

■ 문화예술공간의 확보와 활용

기본적으로 문화는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문화는 장소(공간), 환경이 자유로워야 하며 대중과의 자유로운 접촉이 가능해야만 고양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전문화, 다양화, 집중화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여러 분야의 다리(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문화(공간)이며 이러한 문화공간은 다리 역할과 동시에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현대 문화의 특징은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조되었던 과거와 달리 대중으로부터 창조와 향유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이 직접 표현 또는 행위 해 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적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소위 상위문화부터 하위문화까지) 문화에의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문화의 질적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문화정책도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예상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높아진 시민들의 문화 향유 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문화예술공간의 개발과 확보는 시급한 문제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민간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지자체의 큰 행사에 각 시·군이 입장할 때 내건 슬로건이 모두 「문화도시」를 지향한다고 했다.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다. 달리 보면 이 땅에 터를 잡아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지향적」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화자산이 있다는 것이다. 다가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사람 즉 국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개개의 사람(도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identity !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다. 동시에 가장 소중하고 큰 문화공간은 「사람」이며, 아울러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진실을 알았으면 한다. 최근의 문화공간 확보는 대형화, 즉 거창한 건물부터 신축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문화공간의 구성요건은 건물, 주제, 사람(전문인력), 예산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거꾸로 건물에만 치중하거나 예산을 건물 치장하고 유지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문화거점)의 정체성을 무시한 무리한 공간확보는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재활용」의 의미를 포함한다.

기존의 문화재인 고택과 서원, 향교 등을 포함해서 동사무소, 마을회관, 양로원, 교회, 사찰, 방과 후 학교의 교실개방, 문화예술인이 거주하는 작업실, 의지가 있는 작은 카페, 사찰의 성보 박물관 심지어 다방까지도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행위자와 관객이 예술의 우수성과 우월함에 나태하거나 만용을 부리지 않고 거리감 없이 직접 향유할 수 있는 작지만 귀중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남도의 행정력은 문화공간이 전무한 작은 마을에 이러한 문화공간을 발굴해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전통문화를 중심바탕으로 한 문화예술공간 확보

아쉬운 것은 미래의 문화공간에 대한 계획과 예상이 선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화의 원형이 되는 전통문화의 중요한 가치의 발굴에 대해 진지한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지만 실상 많은 기관이나 심지어 민간문화예술단체조차 전통문화는 문화일반의 구색 맞추기의 일환으로 전락되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일부 문화원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엄연한 사실이다.

당해 세대의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원형은 전통문화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통한 문화예술공간 확보는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나타나는 사례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공간을 확보했다하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즉, 하드웨어에만 충실했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음이다.

■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의 중요성 및 필요성

문제는 박물관(기념관, 전시관)이나 미술관, 전통공연장 등의 문화공간의 활용에 대한 인식이 고답적인 방법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문화의 다양한 향유와 접촉기대치는 높아가지만 현실의 경우는 형식적이거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서도 밝혔지만 사람(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와 발굴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유·무형 문화유산(고고학적 발굴과 민속사로 발굴)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흥미있게 활용할 인력(전문가)의 확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유휴 인력(문화자원활동가)의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도 교육에서 할 수 없었거나 소홀했던 「문화기획」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 무형문화유산의 시민참여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경우가 있다. 종묘제례악을 예로 들어보겠다. 종묘제례악의 경우 이제는 전주 이씨들만의 종묘제례악이 아니다. 제관의 위치마다 참가비가 틀리는 현행 제도 보다,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종묘제례악이 전주 이씨의 행사가 아닌 국민적 행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전주 이씨가 참여하지 않는 다고해서 종묘제례악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여가 제한됨으로 관심이 떨어지게 된다.

종묘제례악에 참여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느끼게 할 것이며, 이는 문화유산의 새로운 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참고로 대백제전 처럼 도내 무형문화유산의 재현이나 축제시 자발적 시민의 참여는 문화지수 향상과 지역문화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 충분하다.

■ 발굴 현장과 문화재 보수(복원)공사의 공개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

발굴 현장의 공개와 시민참여는 매장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그러나 매장문화재의 보존방안을 마련한 후 시민에게 공개하고 참여하게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굴지의 공개와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목조문화재가 대부분(약 70%)이며 문화재청 예산의 상당부분이 목조문화재 보수·수리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조물의 경우 150년~200년의 주기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사람의 생존 기간 동안 목조 문화재의 보수현장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복궁 근정전의 경우 3년여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근정전의 결구방식이나 내부를 자세히 연구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행운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사업이 일부관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었다.

충남도내 목조문화재 보수공사 현장에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전면 공개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서 익산 미륵사지처럼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 종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있어 시민 참여

종교와 관련된 문화재들의 주인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전 국민이 주인이다. 지금까지 종교문화재는 특정 종교단체들이 소유와 관리, 활용을 주도해 왔다.

폐쇄적인 관리와 활용과 더불어 인적이 드문 장소성이 더하여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문화재는 도난과 화재의 사각에 놓여있다.

종교문화재 보존과 관리·활용에 있어서도 공개적, 민주적이어야한다.

사찰 성보박물관의 경우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교육의 장소, 문화교류의 장소로 공개되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종교문화재가 되어야한다.

또한 외곽지역에 떨어져있는 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지역 학교와 문화시민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와 지킴이 활동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민간활동의 제도적 지원

문화재보호 활동에 있어서 제도적장치 마련, 법률적 지위, 최소한의 경비 지원(복권 기금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와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